



# 신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통상산업부

## 1. 신경제의 지향과 중소기업 정책

### 가. 신경제의 지향

종래 우리 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발전메카니즘의 근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도록 지시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경제발전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 온 것이다.

편집자 주) 본고는 지난 6월 2일 원광대에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특별 강연한 내용을 밝힌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지며 사람들의 의식도 민주화됨에 따라 이제 그러한 발전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에는 경제자율화가 추구되었으나 이 당시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만 민간주도로 운영되거나 자율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후 '80년대말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정치적 민주화는 오히려 경제발전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개인의 자유가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었기 때문

이다.

“신경제”는 경제발전 메카니즘의 근간이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가져다 주는 개인의 자유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참여와 창의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이것을 기업의 차원에서 보면,

“신경제”란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밑거름이 된다. “세계화”는 우리의 제도·의식·관행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일류를 지향하자는 국가발전전략이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 가는 과정, 즉 “지구촌화(Globalization)”과정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세계일류가 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신경제”보다 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있다. “신경제”가 대체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중에 우리 경제를 선진국에 진입시키기 위한 경제분야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세계화”는 2010년경 우리나라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일류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다.

#### 나.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금년 1월부터 전후 50여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왔던 GATT체제가 WTO체제로 대체되면서 각국의 국내시장개방이 보다 촉진되고 국가간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의 폭이 농산품을 포함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관세인하와 함께 각국의 비관세장벽은 철폐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지만, WTO협

정에 따라 반덤핑관세와 상기관세 절차가 명료히 되고, 국제무역의 분쟁 해결절차가 확립된 것 등은 우리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WTO협정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수출지원금융, 수출손실준비금 등 수출과 국산기자재 사용과 관련된 금융·세제지원은 국제규범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총액대출제도 등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금융이 축소되고 우대금리도 자유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은 점차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체 수의계약제도나 고유업종제도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도 축소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시장개방에 대응한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다고도 시장개방으로 외국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질 전망이다.

#### 다.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

“신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보고 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조립생산 위주에서 기계·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중소기업정책은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의무대출비율이나 정책자금 등과 같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기 보다는 한계기업을 구제하는 데에 더 노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환경변화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신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이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정부정책에 의한 보호나 지원에 계속 의존하여 존속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강하고 튼튼한 자생력을 갖추으로써 경제의 뿌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소기업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잠재적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자동화·정보화를 통하여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것이다.

셋째,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적 관계를 조성토록 유도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 2. 중소기업정책의 추이와 성과

### 가. “신경제 100일계획(’93.3~7)”의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신기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환원하는 등 정부의 예산절감과 같은 비인플레이션적 방법으로 1조 3,000억원을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2,380개 선도적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다.

대출조건은 연리 7%,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였으며, 신청에서 대출까지의 절차를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간소화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자금지원후 1년간의 기대효과로서 생산은 55.5% 증가하고(3

조원), 수출은 62.6%가 증가하며(8천억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인력절감효과는 11,631명, 불량률은 5.3%에서 2.4%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의 판매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자금 1조원을 조기집행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절감분(1,184억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신금지 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비업무용이나 제3자명의 여부를 불문하고 중소기업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종전 매출액의 1/2로 되어 있던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건의와 각 부처에서 발급한 670개 과제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며 ’94년말 현재 622건을 완료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만불 이하의 소액 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농업진흥지역내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3.5)을 제정하여 창업과 공장설립절차, 법정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간소화하였다.

### 나. ’93.7~’94.12간의 중소기업시책

’93년 8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 7,247억원을 44,387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은행에서 보증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업체당 신용보증한도로 매출액의 1/4에서 1/3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93년 4,700억원에서 ’94년에는 9,460억원으로 2배 확대하였다. 특히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을 ’93년 1,500억원에서 ’93년에는 3,3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94.1)을 제정하여 지방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94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재원 1,852억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신경제 100일계획에서 추진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93년	'94년
중소기업구조조정	2,630	800
지방중소기업육성		2,000
공제사업지원	520	-
창업지원	50	100
중소기업기반조성	-	3,260
신용보증기관출연	1,500	3,300
합 계	4,700	9,460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94년 총 2,096개 업체를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인수제도를 확대·실시하여 '94년 상반기에 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4,000여 중소기업에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섬유 및 신발산업에 대하여 1만명을 추가 도입하였다. 산업계의 지속적인 기능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94년 병역특례지정 대상업종을 10개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편입대상 기술자격 종목을 90개에서 696개로 늘렸으며, 4,785개 업체에 산업기능인력 28,894명을 공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년제의 야간장기교육과정 5개과(260명)를 개설하였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을 '93년 237개에서 '94년에는 135개로 당초 예시한대로 102개를 해제하였으며, 단체수계약 대상품목도 '93년 518개에서 '94년에는 315개로 203개를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중소기업관련 8개법률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5개 법률로 통·폐합하였다.

<중소기업 관계법의 개편내용>

- 종전 : 중소기업기본법
- 개편 : 중소기업기본법(전면 개정)
- 제·개정내용 : 중소기업자 범위기준을 근로자수외에도 소유·경영형태의 질적기준 병행 적용
- 종전 : 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 개편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개정 내용
- 자동화, 정보화, 국제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규정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
- 종전 : 중소기업사업조정법
- 중소기업제열화 촉진법
- 개편 :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개정 내용
- 고유업종 해제 근거를 명문화
-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종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개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

- 제·개정 내용
- 창업보육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창업관계 인·허가 일괄처리 확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개정하지 않았음.

다. 중소기업의 현황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 어느때보다 활기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부문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면서 '94년중 생산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2.2%와 15.7% 증가하여 '88년이후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설비투자도 20.1% 증가하였다. 금년 3월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은 11.5%이고, 2월까지 중소기업의 수출증가율은 20.9%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부문이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었고, 아울러 중소기업인·근로자·국민 모두가 땀 흘려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신설법인수(7대도시 기준)는 '90년대 들어 최고수준을 나타내었고, 올해 들어서도 월평균 1,400개 업체가 신설되어 우리산업의 저변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물론 부도기업수나 부도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는

### 중소기업의 실물동향

(단위 : %)

구 분	'91	'92	'93	'94	'95.1/4
생 산 증 가 율	7.4	5.7	2.6	12.2	11.5
수 출 증 가 율	4.8	6.9	14.6	15.7	20.9
투 자 증 가 율	24.1	5.4	9.6	20.1	-

주) '95수출증가율 2월말 현재임.

### 중소기업 창업 및 부도동향

(단위 : %, 업체)

구 분	'91	'92	'93	'94	'95.1/4
창 업 기 업 수	12,249	13,792	11,938	16,723	4,359
(월 평 균)	1,021	1,141	995	1,394	1,453
부 도 기 업 수	6,159	10,769	9,502	11,255	3,081
· 법 인	2,013	3,714	3,402	4,503	1,292
· 개 인	4,146	7,055	6,100	6,752	1,789
(월 평 균)	513	897	792	938	1,027
부 도 율	0.06	0.12	0.13	0.17	0.20

주) 창업기업수는 7대도시의 신설법인 기준임.

있지만, 7대도시의 신설법인만해도 전국 부도법인의 3.4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확장되는 한편 한계기업의 도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산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자금유통의 일시적 곤란, 판로의 일시적 애로 등으로 인해 부도되는 기업들은 정부가 지원하여 부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개방과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므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 3. 향후의 중소기업시책

#### 가.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9일 신경재추진회의에서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을 확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 1)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대폭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까지 중소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00억원 규모이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지어음을 4월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자금공급

을 확대하기 위해 2월부터 연지급금 수입기간을 수출용은 180일(인근지역 90일), 내수용은 90일(인근지역 6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하였고,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완전 자유화 하였다.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현재 1,200억원인 창업지원기금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7월부터는 10대 기업그룹중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하여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현재 자본금의 20%)를 철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는 전액허용하는 한편, 2월부터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로 제조업에 한해 매출액의 1/4에서 1/3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3월부터 중소기업의 증시상장요건도 완화(업력 10년→7년) 하였다.

##### 2)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획기적 보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하반기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여 운용배수를 현행 기본자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출연기한('95.12)도 연장기로 하였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금년도 정부출연액 4,1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5월 현재 2,430억원 출연), 출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중 2~3개 지역에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 운영성과를 보아 전국적으로 확대기로 하였다. 조합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재보증계약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 구조개선 사업의 확대추진

'96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2차 구조개선사업을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 연장하고, 1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 보전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5월부터 중소기업복권을 발행하고 있다.('95년 400억원 발행)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화공단 안에 건립하고 있는 자동화센터(건평 3,837평, 대지 9,000평)를 연말까지 완공하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연수와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4) 품질혁신사업의 대대적 전개  
제품 100만개당 불량품을 100개 이하로 줄이기 위한 "100PPM 품질 혁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전국 전진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서, 5월부터는 업종별·지역별·모기업별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표준협회 등에 전문교육과

정을 개설하였으며, 103개 업체를 모델업체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자문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품질인증기준인 ISO 9000규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종 지도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ISO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94년말 123개에 불과한 인증업체를 2000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품질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5)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금년중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인력·정보·연구시설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여건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97년까지는 20개소로 확대하여 건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연구시설도 개방하여 고가의 첨단연구기자재를 염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일 부품산업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4개 분야인 협력사업의 범위와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협력형태도 단순한 기술이전 차원에서 합작투자 등 적극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

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통상산업부장관이 방일하여 일본 하시모토 통산성장관과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설치, 모델사업의 확대, 대일투자유치단·대한투자환경조사단의 상호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한·일 중소기업 협력업체 현황)

- 주물 : (한국측)중원산업, (일본측)오쿠마호아
- 실린더 : (한국측)삼익공업, (일본측)유타카
- 센서 : (한국측)계코전자, (일본측)무라타
- 자기헤드 : (한국측)뉴맥스, (일본측)일본에너지

### 6)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의 건립

중소기업전용 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작년말 203억원을 들여 서울 목동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중 착공하여 '97년중에 완공할 계획이다.(건평 20,000평)

### 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증진

지난 4월 17일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영자의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협력증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열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계열화업종으로 지정하여 협력생산체제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이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 현재 128개사에 설치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 8)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94년 2,000억원에서 '95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 정읍 2·3공단 등, 전남, 강원에 소재한 5개 공단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농공단지에 준하는 세제·자금 등을 지원할 것이다.

지방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서울에 준하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중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광주·대전에 건립하고, 운영성공을 보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건립해 나갈 방침이다.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기술을 지원해 나가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94년 40개 대학(40억원)에서 금년에는 45개 대학(5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9)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중 1,000억원을 중소기업에게 우선 지원하는 한편,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수원에 올해 4회에 걸쳐 장기교육과정(1년)을 개설하여 세계화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이 쉽게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을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특례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시외지역에 대해 현재 400평방미터에서 700평방미터로 확대하였다.

또한 7월부터는 L/C(일람불)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제를 폐지하고, 기타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도 미화 3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승인 및 사후관리면제하기로 하였다.

#### 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신경계추진회의에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류·부품·소재 등 자본재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사업 육성대책”을 확정

· 발표하였다. 자본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98.8%(2만4천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만큼, 금번 대책은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산기계구입 자금의 금리수준 등 금융조건이 외산기계구입자금보다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96년까지 국내의 금융조건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 국제금리수준의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규모를 1,2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여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96년중에는 외화대출제도를 전면개편하여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기계 뿐만 아니라 국산기계와 리스용 기계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외화대출에 다른 용자대상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되,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계류 생산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계류전문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하였으며, 현재 자본금 규모·참여업체, 대출금리수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95년 2조 8,000억원에서 '96년에는 3조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계류 수출에 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우선 지원할 것이다.